

오세훈 무죄에 민주당 “정치 판결” vs 국힘 “탄핵 빌드업”

국회 법제사법위 종합감사

민주, 사법부 정치 판결 의혹 제기
국힘 “與, 탄핵 명분쌓기만” 질타
고성 이어지며 감사 중단되기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26일 주요 부처에 대한 종합감사가 열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법원이 오세훈 시장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것을 두고 “양방진장인 판결문”이라며 사법부가 정치적인 판결을 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여당이 국민 치안과 안전을 논해야 하는 국정감사에서 오세훈 시장의 항소심과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이야기만 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법무부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판결문을 보면 서울고법의 판결문이 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논리가 뒤섞여 있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과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무부 등) 종합 국정감사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뉴시스

고 말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오세훈 시장 항소심 판결문을 두고 “양방진장”이라고도 했다.

김 의원은 항소심 판결문의 허점을 조

목조목 지적하며, 공정한 판결이 아니라 정치와 결합한 판결이란 취지로 말했다.

같은 당 이성운 의원에 대법관 후보자 재제정 논란, 대법관 현금 격려금 지급,

오세훈 시장 항소심 무죄,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 유죄취지 파기환송 등을 언급하며 조희대 대법원장의 탄핵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노경필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대법원장께서 사법 행정의 대표이긴 하지만 하급심 재판에 대해서 원장을 포함한 누구도 관여할 수 없고, 하지도 않는다”며 “의원께서 말씀하신 여러 재판에 대해서 각 재판부에서 독자적 증거와 사실관계에 따라서 유·무죄를 정하고 형량을 정했을 뿐, 대법원장을 포함한 행정처에선 관여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반면 각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오세훈 시장은 그나마 판결을 성실히 받아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며 “서울고법 형사7부에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유죄 취지 파기환송된 사건이 잠자고 있다”고 지적했다.

각 의원은 “올해 국감 시작할 때 법사위원장께서 민생 국감을 하겠다고 했는데, 시작부터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빌드업(명분 쌓기)으로 시작했다”며 “오늘까지도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이야기를 군불때기 하고 있는 듯 하다”고 질타했다.

국정감사장은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 중에 한 차례 파행을 겪었다. 김 의원은 “대한민국 역사가 아니라 전세계 문명국가 중에서 이런 국가가, 이런 정부가 있었던가 정리를 했다”며 “주요 기관들이 주요 보직들이 대통령의 변호사들로 채워져 있다”고 지적했다. 김민전 의원실에서 국감장에 띄운 PPT(발표 자료)엔 대통령실, 국회, 정부, 공공기관 등에 이재명 재판을 담당한 변호인들이 주요 공직에 진출했다고 알리는 내용이었다. PPT엔 민주당 소속 김기표·박규택 의원의 이름도 있어서 여당 측의 반발이 나왔다. 고성 이어지자 서영교 법제사법위원장도 정회한 뒤 질의를 속개했다.

/박태홍 기자
pth7285@metroseoul.co.kr



여권, 용산공원 개발 추진에 서울시 ‘반발’

규제 완화하는 법안 잇달아 발의
오세훈 시장 “현행 특별법 취지 어긋나”

범여권이 현행법상 규제를 풀어 서울 도심 속 용산공원 부지에 주택 공급을 지원하는 법안을 발의하는 가운데, 당 지도부가 서울 주택 공급을 위해 야당과 서울시의 반대를 극복하고 법안 처리를 관철시킬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인다.

26일 정치권에 따르면 현재 용산공원 부지는 용산공원조성특별법 상 주택 공급이 금지돼 있다. 이재명 정부는 서울 및 수도권 주택 공급 대책인 1·29 대책에서 용산 미군기지 캠프키 부지에 2500호, 용산 501 정보대 부지에 150호를 공급하겠다고 했다. 이에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용산공원조성특별법 개정안이 여당 주도로 발의됐으나 국회에서 야당의 반대로 법안은 계류돼 있다. 교통과 생활 인프라가 발달한 수도권의 양질의 주택 공급 수요가 폭증함에 따라, 본체 부지 일부에도 주택 공급을 가능하게 해야 한다며 이를 가능하게 하는 특별법 개정안이 잇따라 발의된 상태다.

용산공원 본체 부지 일부를 주택 공급에 활용하게 지원하는 법안은 차근차근 조국혁신당 의원이 지난 8월 26일 처음 발의했다. 차 의원은 법안 제안설명에서 용산

공원 본체 부지 중 택지조성 가능 면적을 전체 면적의 20%로 제한하고 공공임대주택, 이익공유형 분양주택, 토지임대부 분양주택만 지을 수 있도록 문턱을 낮췄다.

김남근·박민규 민주당 의원은 지난 15일 같은날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는데, 김 의원안은 본체부지 일부를 제척해 무주택 청년 및 신혼부부를 위한 공공주택 공급 기반으로 마련하도록 했고, 박 의원안은 국민의 주거권 보장을 위한 정책적 필요시, 토지를 매각하지 않는 전제에 한해 본체부지 중 50% 이하를 택지로 조성하는 내용이다.

다만, 법안이 발의된 것과 당의 지원을 받고 실제 처리까지 되느냐는 다른 문제다. 부동산 정책 실패가 국정 지지율이나 정당 지지율 하락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만큼, 민주당의 주택 공급 의지는 확실한 것으로 보인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지난 15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용산 반환 부지는 공원의 기능과 녹지를 살리면서도 기존 시설 부지 등 활용 가능한 공간이 있어 신속하게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며 “부지 전체를 개발하자는 것이 아니다. 청년과 신혼부부가 살아갈 집을 마련하면서 공원의 가치도 함께 높아지는 것이다. 즉 공원과 주거 안정의 양자택일이 아니라 일거양득”이라고 강조

했다.

국민의힘과 서울시의 반대도 넘어야 할 큰 산이다. 용산 복합시설조성지구 내 용산 미군기지 캠프키 등 부지의 규제를 완화해 주택 공급을 지원하는 특별법 개정안은 서울시와 국토교통부의 논의를 지켜보며 국회에서 합의 처리가 무산된 바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1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용산공원 본체 부지, 특히 장교 숙소나 군인 아파트 부지에 아파트로 개발하겠다는 정부 계획은 용산공원특별법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조치”라며 “서울시가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절반 가까운 서울 시민이 (용산공원) 개발에 대해 반대 의견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정비사업 관련 여당이 추진하는 주요 부동산 법안인 도시정비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은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의견 대립으로 계류돼 있다. 민주당은 공공재개발사업 시행자에 대해 용적률을 최대 1.3배까지 건축할 수 있게 높이는 내용의 개정안을 마련했지만, 국민의힘은 민간재개발사업 시행자도 용적률을 최대 1.3배로 상향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상황이다.

/박태홍 기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오세훈 서울시장이 26일 오전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 박정희 대통령 묘소에서 열린 박 전 대통령 서거 제47주기 추모식에서 인사를 나누고 있다. /뉴시스

국힘, 산업화 성과 강조하며李 정부 비판

박정희 서거 47주기 추모식

오세훈 서울시장은 26일 박정희 전 대통령 서거 47주기 추모식에서 “산업화가 잘사는 나라의 기틀을 닦았다면 이제는 잘사는 국민의 시대를 열어야 한다”고 말했다. 나경원·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은 박 전 대통령의 산업화 성과를 강조하며 이재명 정부를 비판했다.

오 시장은 이날 오전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 박 전 대통령 묘역에서 열린 추모식에서 “가난에서 벗어나는 것이 국가의 절박한 과제였던 시절, 박정희 대통령께서는 산업화를 나라의 미래로 제시하셨다”며 “수출의 길을 열고 기간산업을 일으키고 도로와 항만 등 기반 시설을 확충해서 대한민국이 스스로 일어설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셨다”고 평가했다.

다만 현장에서는 오 시장이 발언을 시작하려 하자 일부 시민들이 “너도 역적이야”라고 외치기도 했다.

나경원 의원은 박 전 대통령의 생전 발언인 ‘나는 당대의 인기를 얻기 위해서 일하지 않았고, 후세의 사기들이 어떻게 기록할 것인가를 항상 염두에 두고 일해왔다’를 인용하며 “다음 선거만 바라보는 정치가 나라를 흔드는 지금 이 말씀이 유난히 무겁게 다가온다”고 추모사를 했다.

육영수 여사 피격 사건에 대해서는 “1974년 8월 15일 육 여사님은 북한의 지령을 받은 흉탄에 쓰러지셨다”며 “북한은 반세기 동안, 이 비극의 책임을 부인·왜곡해 왔고, 최근 우리 사회 안에서도 이를 음모론으로 오염시키려는 시도가 있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다음 타자로 나온 이진숙 의원이 발언에 나서자, 현장에 모인 시민들은 “이진숙, 이진숙”을 연호하며 환호를 보냈다.

이 의원은 청년들의 내 집 마련 좌절과 농민들의 농지 보전 어려움, 고물가에 따른 서민들의 고통도 언급하며 “국민의 집과 땅과 삶조차 지켜주지 못하면서 어떻게 민생을 말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별도로 마이크를 잡지는 않았다. 다만 방명록에 “내 일생 조국과 민족을 위하여 박정희 정신으로 새로운 대한민국 건립”이라고 적었다.

한편, 이날 추모식에는 장 대표와 정점식 원내대표, 정화용 사무총장, 임이자 정책위의장 등 국민의힘 지도부와 소속 의원들이 참석했다. 박 전 대통령의 차녀인 박근영 전 육영재단 이사장 등 유족과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도 자리했다.

/박경수 기자 gws0325@

李, 농어민 만나 CPTPP·농지 조사 설득

“피해 없을 것… 직불금 늘려야”

이재명 대통령은 26일 농어민들을 만나 농지 전수조사와 한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했다. 이 대통령은 CPTPP 가입을 피할 수 없는 흐름이라고 했고, 농가를 위한 공익직불금을 상향해야 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농어민과의 대화’를 열고 CPTPP 가입은 전 회원국의 개별 동기가 필요하기에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이게 몇 년 안에 끝날지

도 모르고, 해도 제 임기 안에 최종 타결이 안 될 가능성이 훨씬 많다”고 강조했다.

농지 전수조사에 대해서는 “오해, 우려들이 있는 것도 알고 있다”면서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불의의 피해를 입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농업상생기금 1조원을 마련하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지금 보니 3000억원 남짓이다. 배신감 같은 것이 들 것”이라며 “국가가 어떤 정책을 추구함으로써 생기는 손실을 보전하기로 했으면, 명확히 의무로 이행해야 된다. 신

뢰 회복의 차원에서 그건 정부가 마저 다 채워 넣자”고 말했다.

아울러 양극화 완화 등의 의제를 집중적으로 고민하고 있다면서 그 과제 중 하나로 ‘공익직불금’을 언급했다. 공익직불금은 농업·농촌의 환경 보전과 식량 안보 등 공익적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급하는 보조금이다. 농가소득은 공적보조금과 사적보조금으로 나눌 수 있는데, 공익직불금은 공적보조금에서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한다. 이 대통령은 농가에 대한 직접 지원액을 늘릴 필요가 있다는 입장인 것이다. 다만 공익직불금 상향은 정치적 논쟁으로 변질 수 있다고 밝히면서도 증액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예진 기자 syj@